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휴대 전화를 구입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청소년만 이러한 동의를 있어야 할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려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만취한 어른은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의사 능력의 유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민법에는 의사 능력의 판단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 능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 취급(取扱)하는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의 의사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행위 무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행위 무능력자로, 만 20세 미만의 사람인 미성년자가 있다.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 즉 사회적 약자로 ㉡ 인식(認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즉 부모이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있지만 대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 삼촌, 고모 등과 같은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가 계약으로 인한 효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취소권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때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얻은 이익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 반환(返還)해야 한다. 상품은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 미납 요금이나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대금의 일부를 ㉣ 지급(支給)하면 이는 계약을 추인(追認)*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가 거짓말로 사업자에게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하거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처럼 사업자를 속였을 때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헌법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사유 재산의 소유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민법에는 미성년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최고권(催告權)을 ㉤ 부여(附與)하고 있다. 이때 유예 기간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또 사업자가 미성년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이 잘못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추인: 지나간 사실에 대해 추후에 인정하거나 동의함을 뜻함.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계약은 권리나 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 행위이다.
- ② 친권자와 후견인은 동시에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 나이는 법적으로 의사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성인이 한 계약은 계약자의 의사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하다.
- ⑤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모든 사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4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결과’에 있는 빈칸에 들어갈 항목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인터넷 법률 상담소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의 취소 여부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면 아래에 결과가 나옵니다.		
질문 항목	선택	
	예	아니요
㉦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가요?	✓	
㉧ 부모님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계약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나요?	✓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업자를 속였나요?		✓
㉩ 사업자가 보내온 최고장을 받고, 거기에 적힌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응답을 했나요?		✓
결과	□로 인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5 ㉠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성년자는 계약으로 인해 손해만 있고 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 ② 국가는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 ③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④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지니고 있는 권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미성년자는 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6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람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대하거나 처리함.
- ②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③ ㉢: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줌.
- ④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
- ⑤ ㉤: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

[21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함을 의미한다.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수 있는 ‘응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응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 본다.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

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 추인: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

2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화됨을 의미한다.
- ②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법정 대리인은 판매업자의 해당 측구에 대해 응답해야만 한다.
- ④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거래한 상품 계약의 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상품을 사용 도중 취소하면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금 반환 의무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2. [A]를 바탕으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판매업자가 추가로 요구한 10만 원은 지불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판매업자가 추가로 요구한 10만 원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③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판매업자가 추가로 요구한 10만 원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④ 판매업자는 학생에게 이미 받은 20만 원 외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 ⑤ 판매업자는 학생에게 계약 당시 체결한 다이어트 식품 대금 6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3.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성년자가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 ② 미성년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 ③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암묵적으로 합의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 ④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 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법률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17세)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을(17세)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판매자 병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거래 당시 병은 갑과 을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을의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갑과 을의 부모는 갑과 을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① 갑의 부모는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군.
- ② 을과 을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군.
- ③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노트북 구매 계약은 일단 유효하겠군.
- ④ 병은 갑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겠군.
- ⑤ 병은 갑과 을에게 노트북 구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겠군.

25.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②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
- ③ 나는 친구가 추천한 책을 감명 깊게 보았다.
- ④ 선생님은 지금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 ⑤ 노부모는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으신 모양이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한다. 사람이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려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의사무능력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려면 법률행위 당시 자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민법에서는 의사무능력자 여부, 즉 의사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라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이 제한능력자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구분되며,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능력자제도로 하고 있다. 이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여부는 제한능력자 측, 즉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이지만, 행위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이를 항상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계약을 한 후 자신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제한능력자 측은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해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확대추구권',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㉔ 상대방의 확대추구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확대추구는 제한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으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 확대추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취소 여부에 대한 확대를 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확대를 하지 않으면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㉕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고, ㉖ 상대방의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능력자가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위의 철회권·거절권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권리가

인정된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서 을과 계약을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갑의 취소권이 배제됨은 물론이고 갑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까지 배제되는 것이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제도를 통해 제한능력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역시 규정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위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자.

* 단독행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제도가 발전한 과정을 제시한 뒤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 ②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제도가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 ④ 특정 제도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특정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뒤 사회적 인식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제한능력자로 규정한다.
- ② 의사능력이 있는 제한능력자의 경우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나 후견등기부를 통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제한능력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
- ⑤ 법원에서 제한능력자로 규정한 자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마다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다.
- ② ㉣은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 ③ ㉠과 ㉣은 모두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④ ㉠과 ㉣은 모두 제한능력자 측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 ⑤ ㉠~㉣은 모두 제한능력자제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제한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17세인 A는 악기를 1,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된 A의 법정대리인은 판매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악기를 판매한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판매자는 판매 당시 직원의 강요가 없었고 악기의 특성상 판매 후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함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 잘못이 없다며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 ① A가 악기를 구입한 후 성년이 된 다음 날은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겠군.
- ②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악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군.
- ③ A의 법정대리인이 A의 악기 구매 사실을 1년 뒤에 알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군.
- ④ A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판매자를 믿게 하고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군.
- ⑤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군.

◆ 25 수능 14~17번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 나타난다고 본다.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 내기도 한다.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 넘쳐 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ID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인터넷 ID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생성·변경·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ID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인터넷 ID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인터넷 ID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서 ㉩ 다수 의견은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인터넷 ID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 소수 의견도 제시 되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다.
- ②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 ③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 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1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 ③ ㉧은 ㉦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겠군.
- ④ ㉧은 ㉦과 달리 인터넷 ID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 ⑤ ㉦과 ㉧은 모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ID를 사용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A의 해설에 대한 후기

↳ **b**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는 #~#.

↳ **a**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

↳ **c**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

(단, '#~#'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이다. ID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A, B, 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㉔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② ㉔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③ ㉔와 ㉔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④ ㉔와 ㉔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⑤ ㉔, ㉔, ㉔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17. 문맥상 ㉔~㉔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 완성(完成)된다고 ② ㉔: 요청(要請)하여
- ③ ㉔: 표출(表出)된다고 ④ ㉔: 기만(欺瞞)하고
- ⑤ ㉔: 확충(擴充)되는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36.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37.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② ㉡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③ ㉢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④ ㉣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⑤ ㉥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3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겸비(兼備)하면 ② 구비(具備)하면 ③ 대비(對備)하면
- ④ 예비(豫備)하면 ⑤ 정비(整備)하면

◆ 19년 3월 고3 22~26번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권주식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

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협에도 취약해진다. ㉡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정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2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 ②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 ③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다.
- ④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으로 한다.

제7조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①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 ②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 ③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 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2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

26.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 ② 돌맹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다니기가 불편하다.
- ③ 그는 매일 아침 학교 앞 사거리를 거쳐서 회사로 간다.
- ④ 그 일들은 우리가 합의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 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에 거칠 것이 없어졌다.

- 출전: 박승룡 저. 《주식회사법》

- 정답: 22.④ 23.③ 24.⑤ 25.③ 26.④